

“힘든 한해에도 연말특수 기다렸는데”...자영업자들 ‘한숨’

오미크론 공포에 송년모임 줄줄이 취소...예약전화마저 뚝 끊겨 암담 “집기 들이고 알바생도 구했는데...거리두기 격상에 희망이 사라졌다” 유치원 학예회도 잇따라 취소...결혼식·해외신혼여행 어떡하나 울상

“집기도 새로 들여놓고 아르바이트생도 구했는데... 올해도 연말 특수 물 건너갔네요.”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31)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지는데,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하

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여행과 결혼, 송년모임 등을 준비했던 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A씨는 “위드코로나 이후 지난달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가짐으로 기자재를 없는 돈을 들여 새 집기를 추가로 갖추고 종업원도 추가했다”면서 “한창 연말이라 바쁠 시기인데 정부가 영업 시간 제한 조치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니 암담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5266명에 달해 역대 최다

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 간 평균 확진자 4088명과 비교해도 1.28배 많다. 지난달 30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면서 확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간만에 숨통이 트이나 했던 자영업자들은 모임 줄취소에 손님 발길도 눈에 띄게 줄면서 낙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광주시 서구 모 한우 전문점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해도 송년모임 예약이 매일 다섯 통이 넘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 예약 전화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아직 기존 예약 취소는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 축소 발표가 나면 줄취소로 이어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빚만 지면서 힘들게 버텨오다가 위드코로나 이후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는데 다시 인원 수를 제한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막막하다

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송년 모임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B(31)씨는 “코로나 확산세로 위드코로나 이후 잡았던 회사 회식, 송년모임이 줄줄이 취소됐다”면서 “친구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부스터샷 맞고 내년이나 만나자’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연말 가족들을 초청해 열리는 유치원·어린이집 단골 행사인 학예회나 크리스마스 파티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광주 모 치원 원장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위드코로나 조치 이후 학예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컸는데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계획했던 예비 신혼부부는 “위드코로나에 맞춰 내년 스페인으로 여행 일정을 계획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어

떻게 될지 계약하기가 두렵다”면서 “벌써 두 차례 결혼식을 미룬 터라 또 미룰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가 확인된 뒤 해외 입국 확진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전남지역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각각 네팔과 독일에서 입국한 화순, 신안지역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미크론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 결과는 3일 정도가 걸린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만큼,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할지라도 임시생활시설로 옮겨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검사가 강조한 재개발사업 개선책은?

‘학동 참사’ 수사 광주지검 이정우 검사 학술대회서 제기 눈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흡한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동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검사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정의당 강은미(비례)의원과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우 광주지검 검사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검사는 이날 건물 해체공사 관련, 현행 법령상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나 자격, 전문가 검토 사항, 방법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경우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이 가능하고 관계공무원도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사실상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라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도 해체계획서가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관리·감독했다는 게 이 검사 지적이다.
이 검사는 이같은 점을 들어 ▲감리방법의 명확히 규정 ▲해체작업자에 대한 감리자의 요청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감리자의 수시 감리 시스템 구축 등의 강화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체작업자의 경우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그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 검사는 불법 재하도급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시 도급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 도급업체 스스로 불법재하도급을 관리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예비 새내기들의 대학 캠퍼스 투어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대학 캠퍼스 투어에 나선 고3학생들이 홍보대사의 안내에 따라 교정을 걷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이승욱 강진군수 사전구속영장

이승욱 강진군수가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 유력 인사 800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 군수 자택과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또 이 군수 외에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비롯, 지역민 20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중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 장흥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5명 숨지게 한 운전기사 집행유예?

관대한 처분 지적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들을 치어 5명을 숨지게 한 여수 카 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사고(광주일보 7월 20일 7면)와 관련, 사고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는 하지만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룡)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9시께 여수시 한재사거리에서 카 캐리어 차량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과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잇달아 들

이반아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숨을 잃은 5명 중 4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당시 카캐리어 최대 적재량(5.3t)을 1.4t을 넘겨 차량을 싣고 가다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는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과실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2개 이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